

기업지배구조 제도·규제 동향 MONTHLY

2026.10.28

I. 주요 개정 법률

▶ ① 내년부터 코스피·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

정책브리핑 | 2026. 10. 20.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액과 관계없이 코스피·코스닥 전체 상장사(SPAC 제외)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

▶ ② 사전투표 넘어 온라인 주총까지...예탁결제원, 전자의결권 플랫폼 개통

아주경제 | 2026. 10. 26.

-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주주총회와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
- 한국예탁결제원, 전자주주총회 및 사전 전자투표·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는 전자의결권 플랫폼 'eVOP' 개통

II. 입법(안) 동향

▶ ① 민주, 기관들 상장사에 적극 의견내도록 공시의무 완화 추진...재계 우려

동아일보 | 2026. 10. 11.

- 더불어민주당, 연기금·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
-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'공동보유'로 보지 않도록 해 5%를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, 재계는 경영권 공격 노출 우려 제기

▶ ② 자사주 소각 확대 시 고배당 세제 혜택 불리...입법조사처 “제도 개선 필요”

뉴시안 | 2026. 10. 14.

- 국회입법조사처, 현행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현금배당만 반영해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

-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주주환원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**고배당 특례 요건에 소각 자사주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** 제기

→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**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**

▶ ③ 주가 누르기 막고 개미 돕지만…"인수 장벽 될 수도" K베어허그 줄타기

머니투데이 | 2026. 10. 15.

- **한국형 베어허그법**(자본시장법 개정안)은 공개매수 등 인수 제안에 대해 **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 검토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고, 제안 내용·검토 계획·판단 결과와 이유까지 공시**하도록 함
- 금감원 용역보고서는 대상회사의 **인수자에 대한 공개질문 및 공개매수기간 연장 요청 권한까지 제안**했으나,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절차 남용과 거래 지연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

▶ ④ 개미도 등 돌렸다…'대주주 먼저' 의무공개매수 재검토 청원, 엿새 만에 5만명

이데일리 | 2026. 10. 22.

- 10. 1. 예정이던 예정이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**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, 선행매수 허용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돌파**
-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은 **지배주주·일반주주 간 형평성 문제**를 제기하며 선행매수 배제 및 비례적 공개매수 도입 촉구

III. 정책 동향

▶ ① "경영권 분쟁서 받은 위임장, '5%를' 대상 아니다"... 대법, 공동보유자 범위 정리

파이낸셜뉴스 | 2026. 10. 5.

-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 임시주총 위임장 대결에서 한쪽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까지 **'공동보유자'로 묶어 5%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지울 수 없다**는 대법원 판단
- 대법원은 **일시적·철회 가능한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공동행사 합의로 볼 수 없다**고 보아, 위임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배척(패소 확정)

▶ ② 거래소,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잠정 유예…법원 결정 여파

한국경제 | 2026. 10. 7.

- 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, 한국거래소는 **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중단**
- 법원은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이 **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**하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짐

→ 한국거래소 보도설명자료 **저성과기업의 신속·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됩니다**

▶ ③ 금감원, 주총 안전별 정보 Open DART로 제공…내년 주총부터

아시아경제 | 2026. 10. 13.

- 금융감독원, **2027년 정기 주주총회부터** 안전별 요약정보와 이사 선임·보수한도 승인·배당 등 세부정보를 **Open DART를 통해 제공** 예정

- 기관투자자가 소집공고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기업별 안건을 비교·분석할 수 있도록 해 **의결권 행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**

→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손쉽게 분석,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DART 개선 및 XBRL 택사 노미 준비를 추진합니다

▶ ④ [단독] 코스닥 승강제 '절대평가' 도입

한국경제 | 2026. 10. 22.

- 정부, 코스닥 승강제에 **절대평가 방식**을 도입해 최상위 '셀렉트' 편입 기업 수를 미리 정하지 않기로 결정
- 코스닥을 **셀렉트·스탠더드·관리군**으로 구분할 예정이며, 재무·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승격되고 미충족 시 퇴출되는 구조(구체적인 승강 기준 및 공청회 일정은 미확정)

→ 한국거래소 보도참고자료 (보도참고자료) 한국경제 '26.10.22 「코스닥 승강제 '절대평가' 도입」 제하 기사 관련 - 거래소는 세그먼트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정요건 및 관련 제도 등은 시장 의견수렴 및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발표

▶ ⑤ '1000원의 벽' 못 넘었다... '동전주' 5개 종목, 사상 첫 상장폐지 수순

파이낸셜뉴스 | 2026. 10. 23.

- 티케이지애강·뉴인텍 등 코스닥 5개사, 10. 22.까지 주가 1,000원을 회복하지 못해 **‘동전주’ 사유로 첫 상장폐지 수순**
-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**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결정**까지는 하되, **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보류할 계획**이라고 밝힘

→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주가 미달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제기에 따른 안내

IV. 해외 이슈

▶ ① ESG 공시 규제 후퇴 vs. 월가는 기후데이터기업 인수 경쟁

임팩트온 | 2026. 10. 13.

- 미국·유럽에서 기후공시 규제 완화가 확산되는 반면, **아시아를 중심으로 ISSB 기준 도입이 확대되고 글로벌 투자자의 기후 위험 데이터 수요**는 지속
-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**금융시장**에서는 기후 데이터와 지속가능성 분석기업을 둘러싼 투자와 인수합병이 이어지고 있음

▶ ② “AI 리스크 방치말라”... 캘퍼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, 'AI 의결권' 행사 참여

글로벌이코노믹 | 2026. 10. 18.

- 미국 캘퍼스(CalPERS)가 의결권 지침에 **'AI 감독 부실 시 이사 선임 반대'**를 명시한 데 이어, 영국 연금협회·뉴욕주 연기금 등 영미권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**AI 리스크를 독립 평가 항목으로 신설**
- 알고리즘 오류와 환각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잇따르면서 부실한 AI 거버넌스가 주주가치 훼손 요인으로 부각되며 **이사회**의 **AI 통제 책임**이 강화되는 추세

관련구성원

이동건

대표변호사

02-316-4297

tglee@shinkim.com

안효섭

수석전문위원

02-316-7264

hsann@shinkim.com

김명서

전문위원

02-316-1693

msekim@shinkim.com

최명

변호사

02-316-1798

mchoi@shinkim.com

이숙미

변호사

02-316-4016

smlee@shinkim.com

윤태준

전문위원

02-316-7969

tjuyoon@shinkim.com

백상현

변호사

02-316-1774

shbaek@shinkim.com